

민주 당권 주자들, 승부처 호남 순회경선 ‘올인’

宋 신진지 견제·鄭 경정자 비판·金 전복 민심 공략
권리당원 30% 호남 투표 돌입… 텃밭 표심 훑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기호순) 등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행 열차에 오르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권리당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에서 승리가 전당대회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 아래 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도 40% 가까운 당원이 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자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호남 순회경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과 조찬과 차담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진지의 정치개입 관련한 생각을 게재했다.

그는 “북구청사가 전남대 후문 쪽에 있는데, 건너편 100m 거리에 신진지 최대 교회 베드로지파 교회가 있다”며 “이곳을 거점으로 전남대생을 상대로 남로당 세포조직 하듯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광주 북구의 건강한 대학문화 발전의 필요성, 기성 기독교단의 각성의 필요성 등 저답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국정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과제가 123개 것도, 제1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날 광주 일정을 마친 뒤 고향인 고흥으로 이동해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민을 만났다. 이후 다시 광주로 올라와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전남·광주 필속 결의대회에 참석해 호남 당원들과 소통했다.

정 후보도 이날 오전 전남광주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보훈단체와 만나 민심을 살폈다. 오후에는 광양 상황스포츠허브에서 지역 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여수로 이동해 진남시장과 학동상가를 돌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그는 전남광주 방문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와 송 후보를 싸잡아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은 팬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직 대 개인의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후보의 말은 곧이곧대로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를 싫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송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통령과 송 후보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1일 고흥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다 더 친할 것”이라며 “그러나 송영길이 밀면 패배한다는 ‘송밀필패’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호남권 민심을 겨냥해 “양무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었다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 호남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는 글을 SNS에 남기도 했다.

김민석 후보도 전북을 찾아 호남 순회경선에서의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새벽 전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1일 전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를 한 그는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새롭게 원대한 전북 메가플랜을 만들고 이뤄내겠다”며 “전북도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전북과 새만금의 황금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2차, 3차 대기업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 현대차 투자 초고속 확대 성사, 협력 기업 유치 성사, 미국과 중국 등의 AI 관련 세만금 투자 성사 등을 공약했다.

전북에서의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오후 서울로 이동해 송파구 가락동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했다.

녁에는 구로구 송해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서남포럼 김민석·김용 후보 초청 전진대회’에 참석, 수도권 민심을 살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권 순회경선은 오는 15일 열린다. 전남광주에서의 합동연설회는 오후 1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북 합동연설회는 오후 5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호남권 순회경선 투표는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13~14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15일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발굴 본격화

의원·직원 대상 특별법 교육
법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점검

전남광주특별시의의회가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용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된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련된 만큼,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분야별 연구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특별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용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는 한편,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광주특별시의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광주 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것인가

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형곤 의장은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를 발굴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종합해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법령 재개정 속도”

“메가특구법, 기업 혁신 역량·노동자 건강권 지키는 방안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



한병도 대표의 사진.

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7급 주무관이 외주 없이 AI 프로그램 직접 만들었다”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AI 행정혁신 사례 소개’ 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이 외부 용역 없이 직접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 행정 혁신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국무회의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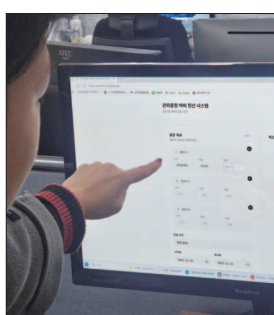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민형배 특별시장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AI 서비스 혁신추진단’ 신설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느린 개발 속도와 행정 비효율을 깨기 위해 범부처 조직인 ‘국민AI 서비스 혁신추진단’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민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AI 전문인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산 7급 주무관이 출장 여비 자동 계산 프로그램인 ‘AI 여비문’과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지원 시스템’을 외부 용역 없이 직접 개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 시장은 “지방정부든 중앙부처든 민간개발자 채용도 필요하지만, 현장 행정을 잘 아는 직원을 교육해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처럼 행안부가 추진 중인 AI·데이터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크게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AI 챔피언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작년 540명에 이어 올해는 약 1200명이 배출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최고급 개발 실력을 갖춘 ‘블랙등급’ 18명과 ‘블루 등급’ 76명 등 핵심 인재들을



민형배 특별시장의 사진.

이번 혁신추진단 팀과 연계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7월 현재 블루등급 4명 등 AI 챔피언 5명을 배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무원 AI 역량강화를 위해 AI 챔피언 인증 획득 시 부서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AI 챔피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AI 역량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반복·단순 업무를 줄이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관외출장 여비 정산 시스템인 ‘AI 여비문’과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지원 시스템’, ‘업무자동화(RPA) 확대’ 등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지원 시스템’은 평가위원 선정부터 정량·정성 평가, 종합점수 산출, 수당 지급까지 계약 행정절차 전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평가 기준을 프로그램화해 계약 행정 절차 전반의 객관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하반기에 직원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체 확대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새나간 2조6562억 환수 못해”

전진숙 “적발하고도 범죄수익 못 걷으면 불법개설 끊을 수 없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건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사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계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

20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 2015년 징수율은 5.55%, 2016년은 6.29%, 2017년은 4.45%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5.75%, 올해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전진숙 의원의 사진.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1조22219억9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율은 92.20%였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 900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